또 다른 의미의 식목일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컬처엔지니어

언젠가 인터뷰에서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주저 없이 치켜든 것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었다. 장 지오노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아주 얇지만 더없이 풍성한 책이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27년 전인 1996년이었다. 길지 않아 단숨에 읽어내려 갔던 책이었건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아 30년 가까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이름의 양 치던 사람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삼사 년 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숨을 거둘 때까지 40년 가까이 프로방스의 황무지에 떡갈나무와 너도밤나무를 심은 이야기다. 1935년 어느 날 언론은 새로운 숲이 발견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정부시찰단 역시 감탄하며 '천연의 숲'을 둘러보았지만 정작 그것이 부피에라는 한 사람이 버려진 황무지에 도토리알 한 알 한 알을 정성들여 심고 가꾼 숲이었음을 알아채진 못했다. 부피에의 숲은 두 차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오늘날 프로방스의 풍성한 숲을 이뤘다.

프랑스에 부피에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임종국이 있었다. 자기 이름 그대로 '숲[林]의 씨[種]가 되어 나라[國]에 보국' 한 한국인이다. 그는 한국전쟁 후 속살 드러낸 민둥산에서 조림은커녕 나무 뿌리까지 캐내던 배고프고 못살던 50년대 중반에 570여ha의 광대한 산야에 걸쳐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 250여만 그루 나무를 심고 그것을 물지게를 져가며 키워낸 당대의 '미친' 이단아였다. 그 미친 짓의 결과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일대 축령산 기슭에 빼곡히 들어찬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울창한 숲이다. 이 숲은 지난 2000년 '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었고 현재도 세계산림조림사에 남을 명품 숲이 되었다.

엊그제 화마에 휩싸였던 인왕산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할 만큼 우리는 본래 숲의 나라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의 산야는 헐벗게 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삼림을 벌목해 군사용으로 전용하고자 일제는 1905년 11월에 육군목재창(陸軍木材廠)을 만들고 이듬해 1906년 10월 쓰러져가던 대한제국정부를 강박해 '압록강 두만강 삼림경영협동약관'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1907년 4월 1일 자로 통감부 영림창(統監府營林廠)을 세우고 사실상 육군목재창의 지휘관들이 통감부 영림창의 운영을 떠맡게 된다. 이들에 의해 도륙하다시피 벌채된 목재는 병영지 건축자재와 전신주의 자재로 쓰였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조선총독부 영림창으로 확장된 이후에 무분별한 벌채에 의한 삼림 파괴는 더욱 가중되어 압록강 두만강 유역만이 아니라 내륙의 오대산 등지에서도 광범위한 벌채가 감행됐다. 급기야 1916년 조선총독부 청사(구 중앙청) 건립 때 지반 강화를 위해 조

단언컨대,
숲의 미래와
나라 미래가
다르지 않다

선총독부 영림창에서 공급한 9400여 그루에 달하는 낙엽송이 땅속에 박혔다. 지난 1995년 개시된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와 그 후의 경복궁 복원 공사는 이 중 상당수를 그대로 땅에 묻어 놓은 채 진행되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나마 우리 산야를 지키고 있던 소나무 역시 일제강점기에 남아나지 못했다. 일제 말에 기름 공급이 원활치 못해지자, 소나무 송진에서 송탄유를 추출해 이것을 항공유로 쓰겠다고 일제가 광분했기 때문이다. 애국가 2절에 묘사된 것처럼 '철갑을 두른 듯'한 소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칼로 난자해 벗겨내고 다시 상처를 내서 소나무의 진액인 송진을 채취한 것이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1만여t의 송진을 수탈했다. 1943년 한 해 동안 채취한 송진의 양은 자그마치 4000여t에 달했는데 이는 50년생 소나무 90여만 그루에서 꼬박 일 년을 채취해야 가능한 양이었다. 송진을 채취하고 난 소나무는 베어내기 일쑤였지만 지금도 전국의 산야에 송진 채취를 위해 흉물스럽게 껍질을 도륙당한 소나무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이 이 땅의 사람들이 겪은 일이었다면, 송진 채취는 이 땅의 나무들이 온 몸으로 겪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분단 그리고 전쟁의 상흔으로 황폐되고 버려진 황무지에서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 한국전쟁 이후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다시피 해 더 황폐해진 대한민국의 산야에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녹색 꿈을 심고 오늘날 대한민국 숲의 토대를 만든 이는 다름아닌 박정희였다. 그가 1960~1970년대에 걸쳐 치산치수(治山治水)에 들인 공은 그의 모든 정치적 허물을 덮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가 일궈낸 대한민국이란 숲이 곳곳에서 타들어가고 있다. 건조한 봄철의 산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숲 도처에서 가치가 허물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지만 작금의 위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막론하고 가히 총체적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숲, 대체 어찌할 것인가!

숲은 나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무는 '나[余] 무[無]' 곧 '나 없음'이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나 없음'의 나무 같은 존재들이 고요하고 풍성한 숲을 이룬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의 숲은 '나무(나 없음)'가 아니라 '나[余]유[有]'(나 있음)라는 이들이 나서 서로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새도 깃들지 않는 버려진 숲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무(나 없음)'가 아니라 '나유(나 있음)'만을 목청 돋우며 고집하는 한 우리 모두의 숲은 황폐화되고 만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은 너나없이 이 황폐화해가는 숲에 새 정신, 새 기풍이 깃들길 고대하고 있다. 그러려면 구부정하게 제멋대로 자라 지력만 갉아먹는 아까시나무 같은 것들은 속아내고 곧게 높이 자라 쓸모 있는 편백나무, 삼나무 같은 것들과 다양한 과실수 같은 존재들을 더 많이 심고 키워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바탕 위에서 하나된 숲을 이뤄야 우리가 산다. 숲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가 결코 다르지 않다.

社說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봉쇄된 곳은 없다. 북한조차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법에 반대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 득표에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국회 소수당이 아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희귀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국회 다수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거부권이다.

동영상 사설

국가 도약의 발판 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

방한 중인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일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시민 수천 명의 환영을 받은 실사단은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생태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부산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준비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실사단이 이번에 작성하는 보고서는 6월 BIE 전체 회원국들에 제공돼 11월 말 열리는 개최지 결정 투표의 공식 참고 자료가 된다.

부산이 유치하려는 엑스포는 그동안 한국에서 열렸던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행사다. 부산엑스포는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힌다. '등록 엑스포' 사이에 소규모로 열리는 것이 '인정 엑스포'인데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수포가 이에 해당한다. 규모 차이가 5~10배에 달한다.

등록 엑스포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들이 자국관을 자비로 건설한다. 6개월간 방문객이 3000만명이 넘어 그 자체로 흑자 구조다.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경우 61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파리, 런던, 뉴욕, 상하이 같은 세계적 도시들이 바로 엑스포를 통해 성장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BIE 총회까지 7개월 남았다.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앞세워 개도국들에 대대적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사우디는 171개 BIE 회원국 가운데 100곳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치 가능성이 희박했던 국제 행사들을 개최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온 저력이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대표적이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줄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 우리에겐 사우디에 없는 것이 많이 있다. 전쟁을 딛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일군 기적의 성공 스토리 자체가 최대 자산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즐비하고 K팝, K콘텐츠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도 압도적이다. 국민적 유치 열기까지 더해진다면 지금의 열세도 극복 못할 것은 아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

정부도 국회도 방치, 국가가 조장한 '김치 코인' 범죄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피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광풍이 급기야 살인까지 일으킨 것이다. 특히 '김치 코인'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상당수가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인데, 그중 3분의 1은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김치 코인이다.

국내 2·3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이 돈을 받고 김치 코인을 불법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가 불법 상장을 한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엔 새 김치 코인이 상장돼 가치가 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채굴권을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 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면 400%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7000여 명에게 136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가상화폐 범죄로 생긴 피해액이 4조7000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70% 이상 많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 거래액이 한때 코스피 시장의 2배인 하루 30조원이었고, 투자자가 7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이 됐는데도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든 2030세대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화와 법제화를 미뤘다.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이 가상화폐 또는 거래소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안에도 우리만 위험을 방치해왔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21년 5월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총 18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낮잠 자고 있었다. 투자자 피해가 50조원 넘게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후에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관련 처벌 법도 없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범인을 송환하라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가상화폐 범죄는 국가가 조장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정상회의 vs 중공 보아오포럼
자유연대냐, 전체주의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 · 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 中共 일대일로 선전행사에 당당히 맞서
윤대통령, 세계와 연대해 민주주의 수호 선언…
부패·가짜 뉴스와 전면전쟁 선포
부패 기득권, 가짜 뉴스 퍼뜨리며 민주주의 위협
기회주의 언론, 가짜 민주주의 세력에 부화뇌동

[편집자 주]
'다보스포럼'에 대항, 중국공산당이 만든 '보아오포럼'이 3월 28~31일 중국 해남에서 열렸다. 한국에선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최태원 SK 회장, 오영훈 제주지사 정도만 참석했다. 문재인·이재명·박원순이라면 열일 제치고 참석했을 것이다.
같은 기간(3월 29~30일) 서울에선, 한국·네덜란드·잠비아·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열렸다. 자유민주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정치 구조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핵보유국 무력침략의 당위성이 심판받고 있다.
이런 변화에 주요 국가들, 특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독일의 행보는 숨 가쁘다. 중요 정상회담만 봐도 이렇다.
2.25 독·인(올라프 숄츠·나렌드라 모디), 3.16 한·일(윤석열·기시다 후미오), 3.18 독·일(숄츠·기시다), 3.21 중·러(시진핑·푸틴), 우크라이나·일(젤렌스키·기시다), 4.26 한·미(윤석열·바이든), 5.19~21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국내 언론과 야당은 둔감하다 못해 무지하다. 반일·종족주의적 선전·선동에만 몰두 중이다. '보아오포럼'에 맞서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의미를 알아본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국내 언론과 야당은 우물 안 개구리

이 시대 자유인들과 자유 진영, 그리고 자유 정부의 사명은 무엇인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두 차원에서, [권위주의·전체주의 + 그들의 부정·부패 기득권]을 척결하는 일이다.
국제적으로는, [시진핑 중화 제국주의 + 푸틴 러시아 전제(專制) + 북한 세습 전제]가 부패한 [권위주의·전체주의 진영]이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권력 맛·돈맛에 취한 [NL 극좌 운동권]이 [부패한 기득권]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對 '보아오포럼' 가치와 철학, 정면 충돌했다

3월 29일 한·미 등이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공동선언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반(反) 부패 투쟁]은 결국 같은 과제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하는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도 [권위주의·전체주의 기득권]과, 이에 대한 자유·공정·반부패 투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패 기득권 세력]의 힘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왜 막강한가? 일부 [기회주의 기득권 카르텔]이 좌파 세(勢)에 영합하고 장단 맞춰주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하는 그들의 가짜 뉴스 생산·유통이 그렇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가짜 뉴스

여의도 정가가 가짜 뉴스 생산현장이라 한다. 여기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을, 야권 누군가가 매체에 발설한다. 이걸 좌파 매체는 물론 비(非) 좌파 매체들까지 받아 왕창 키운다. 이 커진 뉴스를,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써먹는다.
최근엔 김성한 안보실장이 마치 김건희 여사한테 잘렸다는 양 만들어 갔다. "여의도 바닥엔 파다하더라"라는 식이다. 이게 확인된 정식 뉴스일 수 있을까? '후쿠시마 방사능 멍게' 어쩌구, '일본과 전쟁 임박' 저쩌구는, 또 어떻고?
그렇다면, [극좌 가짜 민주주의 + 기회주의 가짜 뉴스] 결탁에 자유민주 진영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힘부터, '화낼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4 공천도, '화낼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로 떨어져도 할 건 할 것"이라 했다. 이 초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길!
▲ 선동가들 ▲ 그들의 팬덤 그리고 ▲ 가짜뉴스 횡포에, 눈 한번 깜빡하지 말길!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4월 2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광고형 기사'를 지원해주세요 21번째입니다.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